

이번 주민의식조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호남을 배제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우대하는 각종 정책을 펼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광주·전남의 낙후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민들은 또 그동안 호남을 뒷받침으로 여겨온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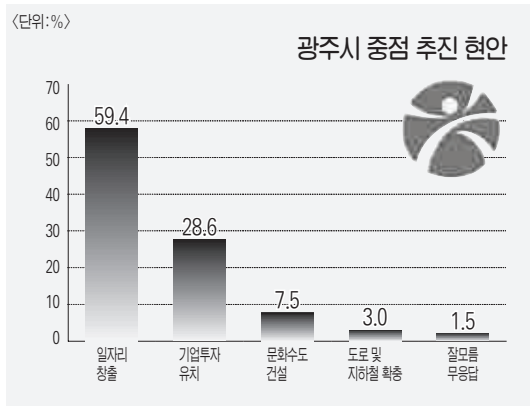
광주·전남 주민 의식조사

광주일보·리서치 앤 리서치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 호남 배제”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8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35.8%였으며 '매우 잘 못했다'는 답변이 47.1%였다. '어느 정도 잘했다'는 8.7% 그리고 '매우 잘했다'는 1.5%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0.2%에 그쳤다.



■ 지지 정당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 가운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절반이 훨씬 넘는 55.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 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도 11.7%를 기록, 민주노동당이 두자릿수 지지도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자유선진당은 1.6%, 창조한국당은 1.1%, 친박연대와 진보신당은 각각 0.6%씩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무려 25.7%가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변, 정당에 대한 실망과 이에 따른 무관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민주당의 역할 수행 평가

지난 수십 년간 호남을 정치적 뒷받침으로 여겨온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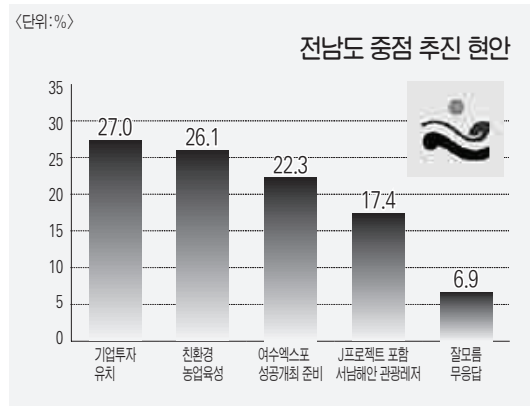
지방 침체 부르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잘못 76%

민주野 대표 정당으로 제역할 수행 못한다 78%

주당에 대해 지역민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압도적 다수인 77.9%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1%에 불과했다.

■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 평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그리고 시·군·구의회가 지역민을 대변해 집행부를 비판·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들의 67.7%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3.1%에 그쳤다.

■ 정부의 호남 배제 여부

이명박 정부가 인사와 각종 정책에서 호남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30.8%,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35.7%로, 전체적으로 66.5%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가 호남을 배제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지역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

다. 반면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7%였으며, '절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평가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7%가 '지방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잘못된 일이다'고 평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국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잘하는 일이다'라는 응답은 11.1%에 불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 '5+2 광역 경제권' 구상 평가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5+2 구상에 대해서는 소폭이나마 부정적인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5+2 구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1.8%로 집계됐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8.9%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자도 비교적 많은 19.3%였다.

■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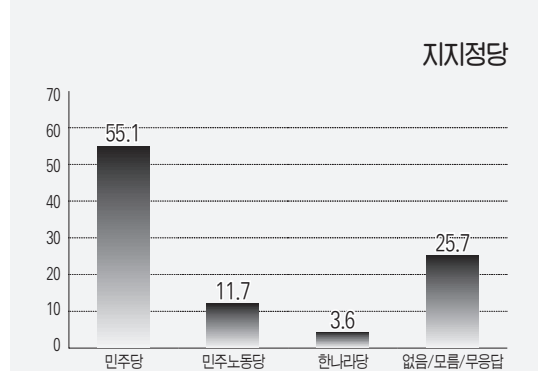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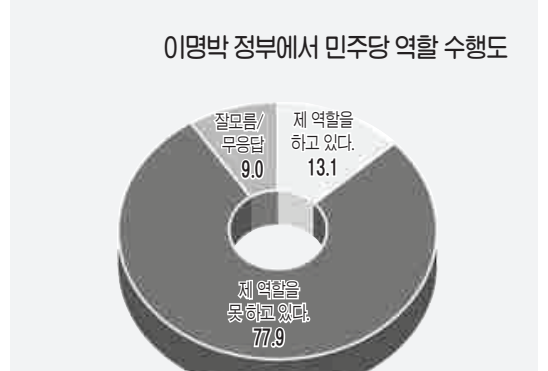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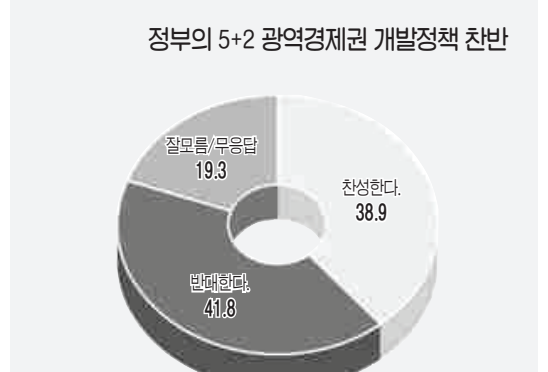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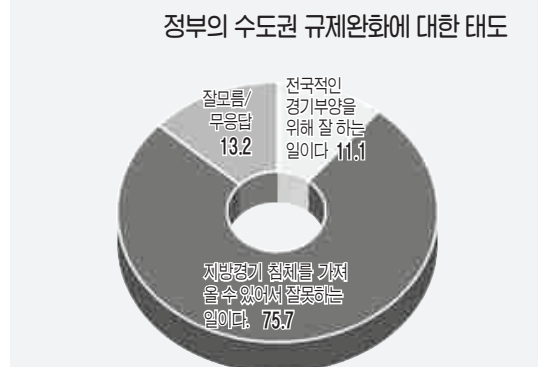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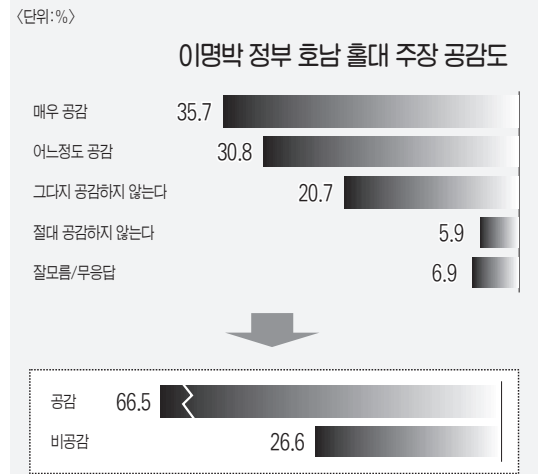
광주지역민만을 대상으로, 광주시가 새해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를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59.4%)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기업투자 유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도 28.6%였다. '문화수도 건설'(7.5%)과 '도로 및 지하철 확장'(3.0%)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남도가 집중해야 할 현안

전남도민을 상대로, 전남도가 새해 들어 가장 중시해야 할 부문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유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27.0%를 차지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는 응답도 26.1%를 기록했으며, '2012여수박람회 성공 개최준비'에 방점을 찍은 지역민도 22.3%였다. 'F1대회를 포함한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17.4%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조사 어떻게 했다

2009년 신년 주민의식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 의뢰, 지난해 12월 23일 실시했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가운데 500명을 유효 표본으로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와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방식(CATI)이 사용됐다. 각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 성별·연령별로 쿼터를 할당한 뒤 전산화된 전화번호 인명부에서 무작

광주·전남 거주 만 19세 이상 男女 500명 표본

위로 추출한 응답자(표본)는 광주 203명(40.6%) 전남 297명(59.4%)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245명(49.0%), 여자 255명(51.0%)이었고, 연령별로는 19~29세 99명(19.8%), 30대 102명(20.4%), 40대 106명(21.2%), 50대 이상 193명(38.6%)이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74명(14.9%), 자영업 65명(13.1%), 블루칼라 41명(8.3%), 화이트칼라 52명(10.3%), 가정주부 136명(27.3%), 학생 60명

(11.9%), 무직·기타 71명(14.2%)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적' 148명(34.3%), '진보적' 283명(65.7%)였고, 월소득수준은 100만 원 이하 107명(26.2%), 101~200만 원 92명(22.4%), 201~300만 원 83명(20.2%), 301~400만 원 64명(15.7%), 401만 원 이상 63명(15.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5.6%, 그리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